

일본시민사회의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

김 영 필*

2003년 3월의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시작된 명분 없는 전쟁은 많은 국가에서 반전·평화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반전운동의 무풍지대였던 한국에서도 이번 전쟁에 대해서는 기존의 촛불시위와 맞물리면서 반전, 평화운동이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이러한 반전·평화운동으로 촉발된 한국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국가발전과 한반도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에 있어서의 평화체제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가장 큰 목적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레벨, 또는 시민사회레벨에서 평화운동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그러한 평화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 실현을 위해 정진하고 있는 일본시민사회의 움직임에 대하여 고찰해보고, 이 구상에 한국시민사회가 동참하기 위한 조건과 그 가능성을 검토해본다.

본 논문에서는 핵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일본의 시민사회가 비핵, 평화도시 선언운동, 원수폭 금지운동, 비핵 “고베방식” 등의 독특한 방법으로 일본의 전후평화를 유지하여온 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정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운동을 기초로 인류보편의 가치인 평화를 동북아지역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일본시민사회의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의 제안에 우리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동북아에 있어서의 평화체제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고 있다.

주제어: 일본시민사회, 비핵지대화, 반전, 평화운동, 핵무기, 고베방식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1. 들어가는 말

지난 3월 20일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대 이라크 공습으로 시작 된 이라크 전쟁¹⁾은 UN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명분 없는 전쟁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반전·평화운동이 활화산처럼 솟아오르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반전·평화운동은 한국에서도 당연히 일어났는데, 2002년 여름 2명의 여중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압사 당한 이후, 초겨울부터 시작된 촛불시위와 맞물리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게 진행되었다.

과거 한국은 반전운동의 황무지였다(경향신문 2003. 3. 31). 세계적으로 반전운동이 열풍처럼 불어대던 베트남 전쟁 때에도 우리국민은 많은 국군들을 박수갈채 속에 전장으로 내보냈다. 그러했던 한국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적극적이며 모범적인 반전·평화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첫째는 한국의 민주화에 따른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의 약화이다. 군사문화의 일소, 정치권에 있어서의 세대교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

1) 전쟁을 “일정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국가 간의 무력투쟁”이라고 정의할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이라크 침략으로 전개된 상황을 전쟁으로 부르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듯싶다. 왜냐하면, 이라크가 무력으로서 미국 등의 연합군에 대항한 흔적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고작 자살테러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국내의 일부 언론에서는 이라크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을 당시에 “미국의 이라크 침략” 내지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이라크 영내에서 벌어졌던 미국 등에 의한 이라크 침략행위를 “이라크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있어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다. 필자도 국가 간의 무력투쟁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라크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정의를 “이라크 영내에서 벌어졌던 미국 등의 침략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그러한 의미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경험세대가 우리 사회에서 소수로 전락된 것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둘째는 민주화 이후 정치적으로 많이 성숙된 시민사회의 축적된 힘의 존재이다. 참여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국의 시민사회의 힘은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으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민사회의 힘을 운동의 힘으로 결집시키는데는 무엇인가 촉매제를 필요로 한다.

미국의 국제평화학자인 나이젤 영(Nigel Young)은 1899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제1회 세계평화회의 이후 지난 1세기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평화운동에 동원된 형태로서 다음의 10가지(坂本義和編 1995: 239-243)를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 종교적 평화운동. 두 번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세 번째, 반전운동. 네 번째, 징병에 대한 반대운동. 다섯 번째, 사회주의 운동. 여섯 번째, 불세비키형의 전투적 동원. 일곱 번째, 비폭력민족주의 투쟁. 여덟 번째, 1950년 이후의 국제주의적 여성운동. 아홉 번째, 1960년대 이후의 포스트 공산주의, 무정부주의적 사회주의의 신좌익운동. 열 번째, 1970년대의 환경운동과 반원자력 발전소운동의 녹색당적인 운동.

이 10가지 평화운동의 동원형태는 때로는 어느 한 가지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었고, 어떤 시기에는 어느 동원형태만이 의미를 지니기도 하였다. 또한 어떤 시기에는 복합적인 동원형태로서 평화운동이 주도되기도 하였다.

지난 이라크전쟁 때 한국에서 반전·평화운동에 동원되었던 형태는 위의 10가지 동원형태 중에서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이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의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반전·평화운동에 임했던 사실이 그것을 잘 나타

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폭발적인 반전·평화운동의 전개는 영이 제시한 10가지 동원형태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영의 분석은 전 세계적으로 대량 동원을 가능하게 한 요인에 대한 분석이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국가의 특수성을 설명하기에는 때로는 한계에 봉착하기도 한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에서의 폭발적인 반전·평화운동의 전개는 21세기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0년 6월 15일의 역사적인 남북정상간의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간에는 상호신뢰의 기운이 상당할 정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민족주의는 상당히 공고화되었다. 반면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부시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의 일방적인 세계패권전략에 많은 거부감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이며, 9·11테러 이후의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한국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더구나 지난 여름의 여중생 압사사건의 해결과정에 있어서 미국의 무성의하고 고압적인 자세는 우리 국민들에게 반미주의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주도의 일방적인 이라크 침공은 한국에서 맹렬한 반전·평화운동을 낳게 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전·평화운동의 동원의 핵심은 반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애써 외면하거나 왜곡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현재 한국에서의 반미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1980년의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싹튼 반미주의의 국민적 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침공 43일만에 부시대통령이 승리선언을 함으로써 끝이 났다. 이라크 침공이 일방적이었듯이 승리선언 또한 일방

적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전투행위의 종결일 뿐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현재 국제적으로는 이라크 전쟁 이후의 전후처리 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촉발된 국내외의 제문제들에 대한 처리를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반전·평화운동으로 발산된 시민사회의 힘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인식일 것이다.

지난 세기의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 내전과 냉전을 겪으면서 가장 큰 정치적 목표로 민주주의의 실현과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정착 그리고 통일을 내세웠다.

다행히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필요로 하기는 했지만, 1987년 일련의 정치과정 속에서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세계 유수의 민주주의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1997년의 대통령선거에서는 국정사상 처음으로 당 대당의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²⁾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이라는 또 하나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 통일이라는 국가적, 민족적 대업은 평화정착이라는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과제이기에 우선 시급한 것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정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정착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희생

2) 한 나라의 민주화의 척도로서 유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정권의 교체가 가능한 시스템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형식적으로 선거에 의한 정권의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정권의 교체를 유권자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997년의 대통령 선거는 정권교체가 상시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는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되었던 몇 배, 몇십 배의 희생을 우리에게 강요할지도 모른다. 민주주의의 실현문제가 국가내의 치자와 피치자간의 갈등의 문제였는데 반하여, 평화정착의 문제는 단지 한반도 내의 갈등의 해결로써 이루어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반전·평화운동으로 축적된 한국시민사회의 힘을 어떻게 응집시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기 위하여 우리보다 앞서서 평화운동의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지방자치단체레벨에서 그리고 시민사회레벨에서 반전·평화운동의 일환으로서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일본시민사회의 움직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구상에 한국의 시민사회가 동참하기 위한 조건과 그 가능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2. 일본시민사회의 핵에 대한 인식

1) 피폭국(被爆國) 일본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실전에서 원자폭탄 실험³⁾이 감행된 것은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의 상공에서였다. 아침 8시 15분 새로운 하루의 시작으로 분주하던 대도시를 상대로 무경고(無警告), 무방비(無防備), 무저항(無抵抗), 무차별(無差別)적인 상황아래에서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이었다. 그리고 3일 후인 8월 9일에는 인류 역사상

3)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으로 치닫던 시점에서 투하된 원자폭탄이었기에, 미국이 “자신들이 제조한 원자폭탄으로 실제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기 위한 실험적 성격이 강한 원자폭탄의 투하라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다소 생소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실전에서 원자폭탄 실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다.

마지막이 되어야 할 실전에서의 두 번째 원자폭탄 실험이 같은 일본의 나가사키(長崎) 상공에서 감행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미국의 실전 원자폭탄 실험에 의하여 희생된 사람은 1945년 12월말까지 히로시마에서 약 14만 명(히로시마시의 추정치), 나가사키에서 약 7만4천 명(나가사키시의 추정치)에 달하였다. 두 도시 모두 사망자수를 정확한 근거에 기초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추정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 의하여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으로 두 도시의 모든 도시 기반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이 두 차례의 실전 원자폭탄 실험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대량 살상한 것에 대하여 분개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상기⁴⁾한다면, 일본에 대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는 어쩔 수 없었다고도 생각하고 있다(岡本三夫·横山正樹編 1999: 83). 그래서 일본인들은 다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있었던 인류의 비극이 역사적으로 되풀이되지 않기를 갈구하고 있다(No more Hiroshima. No more Nagasaki).

이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자신의 나라가 저지른 실전에서의 원자폭탄 실험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역으로 “진주만을 잊지 마라!(Remember Pearl Harbor!)”라고 반사적으로 절규하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岡本三夫·横山正樹編 1999: 84).

4) 이를테면, 남경(南京)대학살, 종군위안부의 강제적 동원, 731부대의 독가스 실험, 그 외의 양민학살과 억압 등.

2) 원자력 발전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핵에 대하여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은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는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그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에 의한 공격을 받은 피폭국의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의외라고 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일본은 1950년대의 한국전 특수(特需)를 계기로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는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한 수준 높은 기술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로 이어져 현재는 미국, 프랑스에 이은 세계 제3위의 원자력 발전소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1970년에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에 의문을 품은 반원자력발전소 운동가들에 의한 반대운동에도 직면하였지만, 화력발전소에 대체할 대체 에너지원으로써의 원자력의 우수성 및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어필하면서 마침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신화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게 된다.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신화는 일본내의 반핵 운동가들에게 반핵이라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반대인지, 핵무기에 대한 반대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갖게 했다고 한다(非核の政府を求める北陸三縣の會 2002: 51-52).

그러나 이러한 원자력 이용에 대한 안전신화도 1999년 9월에 발생한 토카이무라(東海村) 임계(臨界)사고⁵⁾를 계기로 서서히 붕괴의 길을

5) 1999년 9월 29일 토카이무라(東海村)의 우란 연료가공공장에서 일어난 임계사고로, 수백 명이 피폭을 당하였으며 그 중 2명이 사망하였다. 사고를 접한 수상관저는 긴

건게 된다. 이 사고 이후, 전국 각지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반원자력 발전소 운동이 힘을 얻게 되고, 주민 투표 등에 의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원자력 안전신화에 견잡을 수 없는 불신감을 갖게 한 것은 도쿄전력(東京電力)에서 오랜 세월 원자력 발전소 내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하여 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다. 이로 인해 도쿄전력은 결국 2003년 4월 15일을 기해 후쿠시마(福島)와 카시와자키(柏崎)의 원자력 발전소 17기에 대한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고전적인 반핵 운동인 핵무기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원자력 이용 그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태이며, 그러한 여론은 반원자력 발전소 운동에도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기도 하다. 즉, 반핵 운동에 대한 국민들 대다수의 적극적 내지는 암묵적인 지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다.

3. 일본내의 비핵지대화 운동

1) 평화헌법과 비핵 3원칙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이 평화국가로서 성장하게 되는 과정에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평화국가 일

급태세를 선언하고, 사고 지역으로부터 10km권내의 간선도로, 철도 등을 봉쇄 조치 하였으며, 권내로의 배달 등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이 사고는 1945년의 원자폭탄 투하 이후에 처음으로 일본 국내에서 피폭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하여 일본의 원자력 안전신화에 적신호를 불러일으킨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본의 전범(典範)으로 불리어지는 헌법(일명 평화헌법)의 존재이며, 또 다른 하나는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의 본토 반환에 즈음하여 당시의 사토(佐藤榮作)수상이 천명한 이른바 비핵 3원칙⁶⁾이 그것이다.

평화헌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점령군으로서 일본에 주둔하게 된 미국이 “천황제적 군국주의”의 부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모책으로, 헌법 제2장에서 전쟁의 포기를 명기하고 있다. 총 11장 103조로 구성된 일본의 헌법 중에서 제2장은 1개조 2개항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본의 헌법을 평화헌법으로 불리게 하는 제9조의 두 개 조항이다.

제1항은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希求)하며, 국권의 발동을 가져오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영구히 포기한다.” 제2항은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외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막스 베버가 근대국가의 3가지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는 경찰권, 사법권, 교전권 중에서 교전권을 포기한 특수한 국가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헌법 조항인 것이다. 때문에 많은 일본의 보수정치가들은 일본이 보통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 제9조의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1993년의 자민당 정권의 붕괴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일

6) 1967년 12월 11일, 일본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사회당의 나리타 토모미(威田知巳) 의원이 미국으로부터의 오가사와라 제도의 본토 반환에 즈음하여 핵무기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묻는 질문에, 당시의 수상 사토가 핵을 만들지 않고(核を製造せず), 핵을 가지지 않으며(核を持たない), 핵을 들여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持ち込みを許さない). 라는 핵에 대한 3원칙을 표명한 것을 뒤에 “비핵 3원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련의 정계개편 과정에 있어서, 일본사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정당의 몰락과 그로인한 일본 정계의 총 보수화, 1999년의 “국기(國旗)·국가(國歌)법”의 성립, 일본 국회 내의 헌법조사회의 설립(2000년) 등 현행 일본의 평화헌법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는 무수히 많다. 헌법조사회는 2002년의 보고서에서 헌법 제9조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으며, 일본의 보수신문의 대표적인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헌법 제9조를 개정한 헌법초안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비핵 3원칙은 다음절에서 논의하게 될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핵·평화도시 선언운동이나, 비핵 「고베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지침이나, 이 비핵 3원칙도 최근에는 보수정치가들의 의도적인 무시 발언 등으로 인하여 수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국회에서 여야당 간의 토론과정에서 하나의 원칙으로 정리되어 정치적으로 선언한 선언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로인해 언제든지 정치적인 발언에 의하여 이 원칙이 파기될 수 있다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일본이 진정으로 비핵화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비핵 3원칙을 법제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 비핵·평화운동 세력들의 공통된 주장이기도 하다.

아무튼 일본이 평화국가 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 양대 지침으로서 기능하여 왔던 평화헌법과 비핵 3원칙이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닌가라는 절대적인 기로에 서 있는 것 만큼은 사실인 것 같다.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가 또는 유지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의 답은 일본 시민사회의 운동역량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비핵·평화도시 선언운동

비핵·평화도시 선언운동은 1980년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시작되었다. 이때는 동서냉전이 아직 계속 되고있는 시기였으며, 유럽의 각 도시는 핵무기에 의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핵무기의 배치는 보복공격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이라는 생각에서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비핵·평화도시를 선언하고자 하는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⁷⁾.

이 운동은 서유럽국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가와 필리핀 등에서 많은 호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일본은 가장 모범적으로 비핵·평화도시 선언운동을 전개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비핵·평화도시 선언운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전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80%가 넘는 자치단체가 비핵·평화도시 선언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비핵·평화도시 선언운동이 지구적으로 생각하여 지역에서 행동한다(Think globally, act locally). 또는 지역적으로 생각하여 지구적으로 행동한다(Think locally, act globally)는 생각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운동이기에 비핵·평화도시 선언을 한 각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국가의 정책과 자세를 변화시키고 그러한 국가의 정책과 사고의 변화는

<표 1> 일본의 비핵, 평화도시선언 자치단체 수(2002년 12월 27일 현재)

구 분	도도부현(都道府縣)	시(市)	구(區)	정(町)	촌(村)	합계
비핵선언 자치단체수	35	615	21	1,580	403	2,654
자치단체 총수	47	675	23	1,980	562	3,287

자료: 일본 비핵선언자치체협의회(<http://www.nucfreejapan.com>)

7) 일본 비핵선언자치체협의회, <http://www.nucfreejapan.com/subindex-outline.htm>(검색일: 2003.04.15)

더 나아가서 지구 전체를 핵과 전쟁이 없는 아름다운 지구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논거가 성립될 수 있다. 실제로 뉴질랜드는 지방자치단체의 비핵·평화도시 선언운동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가 이에 호응하는 형식으로 '비핵법⁸⁾'을 제정한 경위가 있다.

일본의 비핵선언자치체협의회는 협의회의 당면한 목표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일본의 전 자치단체에 비핵·평화선언을 하게 한다.

둘째, 일본 국내에서 비핵법을 제정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전역을 비핵지대화 한다.

셋째, 일본의 전 자치단체에 대하여 원자력 방재대책을 마련한다.

넷째, 각 자치단체는 평화행정을 충실히 하고, 평화박물관을 건설한다.

이와 같이 비핵·평화도시 선언운동은 각 자치단체가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운동이 아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자치단체간의 연대와 교류를 통하여 범 지구적인 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운동인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이와 같은 비핵·평화도시 선언을 한 지방자치단체는 없다. 아직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운동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하고 중앙집권적, 권위적인 정치체제가 오랜 기간동안 있어왔었고, 재정적으로도 열악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시기상조일지도 모른다. 제정과 권한 등에 있어

8) 뉴질랜드를 공식적으로 비핵지대화 하는 법률로서 뉴질랜드의 노동당 정권이 1985년 12월 국회에 제안, 1987년 6월 성립하였다. 뉴질랜드 비핵법의 가장 큰 특징은 핵무기 적재함선의 입항을 거부한 규정인데 “외국함선의 영해 출입은 그 함선이 핵폭발 장치를 적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총리가 인정한 경우에만 허가한다”(제9조)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일본의 비핵「고베방식」을 응용한 규정이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비핵·평화도시 선언을 하는 것은 자칫 중앙정부와의 마찰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핵·평화도시 선언이 우리 인류의 생활에 얼마나 큰 역할과 의미를 지니는가를 생각할 때, 한국의 반전·평화시민운동이 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가 바로 비핵·평화도시 선언운동이 아닌가 생각한다. 개개인이 평화를 만들고 지키기 위한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시민운동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움직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움직이며, 국가는 범 지구적인 이익을 생각하여 행동하게 된다면 핵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동북아 비핵지대화라는 커다란 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우선은 각 개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비핵·평화도시 선언운동에 동참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 지구적인 평화운동을 펼치게 될 때, 세계평화는 가까운 곳에서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3) 원수폭(原水爆) 금지운동

1945년 실전에서 원자폭탄실험 이후에도 미국은 대기중은 물론 지하에서 때로는 바닷가에서 핵실험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던 중 1954년 3월 1일 태평양의 비키니 환초에서 있었던 미국의 수소폭탄 실험에 조우한 일본의 어부⁹⁾가 피폭을 당하여 그 해 9월 23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수소폭탄 실험에 반대하는 도쿄 스키나미

9) 참치어선인 “제5후쿠류마루(福龍丸)호”가 비키니 환초 동방 약 160km에서 미국의 수소폭탄실험에 조우하여 무선장(無線長)이었던 쿠보야마 아이키치(久保山愛吉)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杉竝)구의 여성단체가 처음으로 수소폭탄 실험 금지 서명운동에 돌입, 그 후 많은 단체의 호응을 얻어 1954년 8월 8일에는 서명자수가 449만 명에 달하여 기세를 올리게 되고, 이는 곧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되어 1955년 히로시마 원폭기념일에 맞추어 ‘제1회 원수폭금지세계대회’가 열리게 된다.

이어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가 발족이 되면서 일본의 반전·반핵·평화군축운동을 주도하는 시민운동 단체로서 자리매김 하게 된다. 그러나 당초에는 미국의 핵실험에 반대하는 취지로서 시작된 운동이 당시의 집권당이었던 자유민주당의 보수화와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을 앞두고 정치적 색깔을 달리하는 구성원들간의 대립과 반목이 심화, 결국은 정당 계열별로 분단되어지는 상태를 맞이하기도 하였다(岡本宏編 1986: 153). 일본사회당계열, 공산당계열, 민사당계열로 나누어지는 것이 그것이다.

정당색이 강한 시민운동은 당시의 일본 시민운동의 특색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각 정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시민운동을 정당의 하부기관화 시킨 데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는 이후 발전적인 해체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 1965년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약칭 원수금(原水禁))로 새롭게 발족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다. 원수금은 명실상부하게 일본의 전후 반핵·반전·평화군축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로서 새롭게 태어나, 1960년의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에 대한 전국민적인 대투쟁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이후 일본에서의 대중혁신운동을 주도하는 주도세력으로 부상한다.

실제로 원수금(지방에 있어서는 각지방 원수협(原水協))은 지방자치단체의 비핵·평화도시 선언운동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하였으며, 다음절에서 논하는 비핵 「고베(神戸)방식」이라고 불리는 운동도

주도하게 된다. 각 지역에 있어서의 혁신자치단체 운동에 있어서도 그 역량을 유감 없이 발휘하는데, 196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 초반에 걸쳐서 있었던 혁신자치단체의 탄생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단체중의 하나가 바로 원수금이었다. 원수금은 일본영토의 비핵지대화를 이루려는 운동세력의 핵심에 있었으며, 그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일본사회 전체가 총보수화 되어 가는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수구적인 정치세력들에 맞서는 건전한 시민운동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끌어내는 유일한 전국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단체이기도 하다.

원수금은 1965년 결성될 때, 전신(前身) 운동조직이었던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가 정당간의 알력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역량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사상, 신조, 정당, 정파를 초월한 운동기관으로서 오로지 일본에서 핵을 근절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인 핵의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다. 원수폭금지운동은 완전군축(무력이 없는 상태)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평화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운동이었으며 원수폭 금지운동의 결과로 전후 일본은 계속되는 평화체제 안에서 빠른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4) 비핵 「고베(神戸)방식」

1967년 당시의 사토수상이 천명한 비핵 3원칙 중에서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는다는 2가지 원칙은 일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실천 가능한 원칙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3번째 원칙인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는 원칙이었다.

즉,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국가안보가 유지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3번째 원칙을 일본 정부가 고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실제로 이 3번째 원칙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는 냉전시대에 있어서 여야당간의 논쟁의 대상이었으며, 국회질문에 있어서 단골메뉴이기도 했다. 결국 3번째 원칙은 정부의 적극적 방치정책에 의하여, 국가가 지켜주기를 바라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노력과 의지로 지켜내야 할 원칙이 되어 버렸던 것이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비핵 「고베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비핵화를 이루어내는데 있어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당히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고베항은 군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역으로 미국의 대형 항공모함을 한번에 16척이나 접안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항구이다. 게다가 바로 옆에는 미즈비시(三菱), 카와사키(川崎) 조선소가 있어 군사 전략상으로도 최고의 조건을 갖춘 항구라 할 수 있다(非核の政府を求める北陸三縣の會 2002: 17). 때문에 미국의 군함은 빈번히 고베항을 이용하였으며, 그에 비례하여 미군을 둘러싼 사고와 범죄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고베시의회는 미군범죄도 줄이고 코베시의 무역항으로서의 기능도 충실하게 수행하고, 또한 비핵 3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의 한 방법으로써 비핵 「고베방식」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고안하게 된 것이다.

비핵 「고베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이상과 같은 간단한 시의회의 결의안이 비핵 「고베방식」이라 불리는 원천인 것이다. 이러한 시의회의 결의에 기초하여 고베항에 입항하려고 하는 외국의 함정들은 모두 핵을 탑재하고 있지 않다는 “비핵증명서”를 첨부하여 고베시에 제출, 입항허가를 받아야지만 고베항에 입항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표 2> 핵병기 적재함정의 고베항 입항에 관한 결의

고베항은 그 입항 선박 수 및 취급 화물량으로 보아서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국제상업무역항이다.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사용하기 쉬운 항구이며,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일하기 쉬운 항구로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고베항은 동시에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평화로운 항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항구에 핵병기가 반입되어진다고 한다면, 항만기능의 저해는 물론 시민의 불안과 혼란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고베시의회는 핵병기를 적재한 함정의 고베항 입항을 일체 거부하는 것이다.
이상을 결의한다.

1975년 3월 18일
고베시의회

실제로 고베시의회의 위와 같은 결의 이후에 빈번하게 고베항을 이용하던 미국의 군함들은 한번도 고베항에 대한 입항을 타진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는 미국의 군함들이 핵을 탑재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려는 전략상, 고베항에 대한 이용을 포기한 결과로 이전에 빈번히 이용했었던 미국 군함들의 핵 탑재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고베시는 비핵 「고베방식」에 기초한 비핵증명서를 요구함으로써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비핵도시로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각 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을 비핵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이며,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모든 자치단체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일본전체를 비핵화 시킬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비핵 「고베방식」은 일본의 어느 지역에서든 응용 가능한 방법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비핵 「고베방식」이 법률 또는 조례상의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비핵증명서를 요구받아도 거부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지만, 고베시는 평화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일본국 헌법에 기초하여 비핵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하며, 이는 주민 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에도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시점에서 비핵 「고베방식」이 보다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각 자치단체가 비핵, 평화조례 등을 제정하여 법률적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4. 일본시민사회의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

1)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의 의의

비핵지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이나 공간을 한정하여 그 지역 내에 있어서의 핵무기의 제조, 실험, 배치를 금지함과 동시에 지역 외의 핵 보유국이 그 지역 안에서의 핵실험이나 배치, 그리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비핵지대화 구상에 대하여 일본의 시민사회는 항상 민첩하고 일관성이 있게 대응하여 왔는데, 일본시민사회의 비핵지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일본이 세계에서 평화국가로서 인식되는데 평화헌법과 더불어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다. 일본에서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일본을 비핵화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은 많은 결실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제3장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세계가 점점 글로벌화 되어가면서 한 국가만이 비핵화 된다고 해서 핵무기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

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기 시작했다. 또한, 비핵지대화 구상과 같은 것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에 한 나라에 한정되지 말고 더 넓게 확대시켜가야 할 필요성도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 지구상에는 많은 비핵지대화 조약이 맺어짐으로 해서 핵무기를 지구상에서 폐기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하고 있다.

비핵지대는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1959년의 남극조약을 시작으로 1967년의 우주조약, 1971년의 해저비핵화 조약 등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조약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의 비핵지대화 조약으로서 당사국간의 이해관계가 그리 복잡하지 않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의 비핵지대화 조약으로는 1967년 2월에 서명된 ‘라틴아메리카 핵무기금지조약(Treat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이 처음이다. 쿠바의 미사일 위기로 촉발된 미주지역에서의 긴장을 계기로 중남미 지역에서의 핵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에는 역내의 33개국이 모두 조약에 서명하였고, 5대 핵보유국도 모두 의정서에 서명하여 조약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후, 1985년 8월에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이 체결되고, 1995년 12월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동남아시아비핵무기금지대조약(Treaty on the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에 모두 서명함으로써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에는 5대 핵보유국 모두가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음으로 해서 불완전한 비핵지대화 조약이 되고 있다. 그리고 1996년 4월에는 아프리카 통일기구 가맹국의 53개국 중 49개국이 서명하여 ‘아프

리카비핵무기금지대조약(African Nuclear-Weapon-Free Zone Treaty)'이 성립되었다. 이 조약에는 5대 핵보유국이 의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로써 전지구적으로 볼 때, 모든 남반구 지역이 비핵지대화 지역에 포함되었으며, 점차 북반구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비핵지대화의 압력은 거세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비핵지대화 조약에 포함된 대부분의 국가들은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도 상당히 자유로운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이 비핵지대화 조약에 서명한 이유는 핵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보다는 핵실험의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핵무기의 배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냉정하게 이들 조약의 의미를 되새겨볼 때, 이들 지역에서의 비핵지대화 조약은 그리 큰 정치적 효과를 얻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핵 보유국이 비핵지대화 조약에 서명을 한다든지, 전쟁의 위협성이 높은 지역에서 비핵지대화 조약이 체결된다든지 한다면 정치적으로도 커다란 의미부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세계평화의 새로운 프로세스로써 기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최근 일본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한창인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은 성공여하에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임에 틀림없다.

지리적 개념으로서의 동북아 지역과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동북아 지역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우리는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에 있어서 미국의 참가가 중요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비핵지대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우선 세계 유일의 피폭국으로 비핵지대화 구상에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일본,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상시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한국과 북한, 세계5대 핵보유국 중 러시아, 중국, 미국의 3개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들 국가들 사이에 비핵지대화 조약이 체결된다면, 세계의 다른 모든 지역들의 분쟁문제는 이 지역보다는 훨씬 쉽게 해결이 가능하기에 세계적으로 평화가 정착되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비핵지대화 구상이 실현단계에 다다르게 된다면, 이는 세계 각국이 평화와 공존공영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분쟁지역을 평화체제로 바꾸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2) 동해(일본해) 연안지역 비핵지대화 구상

조약이라 함은 국가와 국가간에 맺어지는 약속으로서 그 주체는 각국의 정부가 된다. 만약 동북아에서 비핵지대화 조약이 체결된다면 그 주체는 동북아 각국의 정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 지역에서의 각국 정부간의 신뢰관계는 그리 높은 단계는 아니며, 국가간의 이익의 충돌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한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의 일환으로 우선 동해 연안지역의 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중앙정부를 배제한 채 교류와 연대를 통한 신뢰조성을 바탕으로 비핵지대화 구상을 실현에 옮기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동북아 비핵지대화 조약을 맺는 주체는 동북아 각국의 정부이지만, 그러한 조약을 맺게 하는 원동력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평화에 대한 염원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非核の政府を求める北陸三縣の會 2002: 39-40).

실제로 1995년 이래 일본의 가나자와(金澤)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주제로 UN이 주관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는데, 가장 큰 테마는 지자체간의 교류와 군축논의이다. 물론 이 군축에는 동해연안 지역들 사이의 비핵지대화 구상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간의 교류를 통하여 각국의 중앙정부에 압력을 행사 이 지역에서 평화체제를 확립시키자는 구상이다.

또한 일본에서 매년 열리는 UN군축회의는 일본의 각 지방도시를 돌아가면서 개최되는데, 정부주관의 행사보다 NGO 주관의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국가간의 이익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된 군축회의보다 시민사회의 공통의 이익에 중점을 둔 실질적인 군축, 평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에 열중하고있다.

‘동북아’라는 개념이 정부 내지는 정치적 개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반하여 ‘동해(일본해)’라는 표현에는 지리적 개념, 지역적 개념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일본의 시민사회가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정치적인 의미의 비핵지대화 구상의 전단계로 동해연안 지역간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환동해권 비핵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결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현실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환동해권 지역간의 교류와 협력, 더 나아가서는 비핵지대화 구상이 생각같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일본의 동해연안 지역도, 한국의 동해연안 지역도 양국에 있어서는 소외된 지역으로 양안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반 조건의 정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과 한국의 동해연안으로부터 발생하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동해연안 지역들이 상당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적인 이유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양안 사이의 이해가 절실히 필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양안 사이의 공통

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호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교류와 협력도 이루어지지만, 실제적으로 양안의 자치단체들은 비슷한 여건의 지역들과의 교류에 소극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악조건을 비핵, 평화와 군축이라는 시점에서 접점을 찾으려고 한다면 환동해권의 비핵지대화 구상도 탄력을 얻게 될 것이고, 이러한 구상의 실천은 동북아 지역 전체로 더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체제를 구축해 내는 힘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3) 도이 다카코(土井たか子)의 21세기 평화구상

55년 체제의 붕괴 이후, 군소정당으로 전락한 사회민주당은 호헌정당, 시민정당, 여성정당의 성격을 지니면서 일본 정계에서 자신들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있다. 시민사회 지향적인 도이 사민당 당수는 2000년 6월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의 긴장완화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긴장완화를 바탕으로 한 21세기의 새로운 평화구상으로서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을 발표하였다.

도이 구상의 핵심은 핵무기도 불신도 없는 아시아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단계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을 비핵지대화 하는 것이다.

우선은 동북아 지역의 비핵보유국이 한정적으로 동북아 비핵지대화 조약의 실현을 선행하는 것으로써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는 방법이다. 그 첫 대상이 한국이었던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도이 당수는 당시의 김대중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을 역설하고 이해를 구하였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원론적인 면에서는 이해를 표시하였지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국가안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

하여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이 자칫 국가 명운에 커다란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도이 당수는 한국과 몽고, 일본, 북한 등이 비핵지대화 조약에 서명을 하고 나중에 핵 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여 미국에 대한 압력을 가해, 궁극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참가하는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은 핵억지력이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구상에 대하여 전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이러한 구상이 정치가로부터 나왔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기도 한데, 이러한 비핵지대화 구상 등은 정치가가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 우선 의도와는 달리 당리당략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평가받는 경향이 강하고, 그로 인해 좋은 구상도 왜곡되어져 전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상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활동가들에 의하여 문제제기 되어지고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옮겨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즉, 히로시마의 아키바(秋葉忠利)시장이 비핵자치체를 전세계적으로 확대하여 최종적으로는 지구 전체를 비핵지대화 한다는 구상(2001년 8월 6일 히로시마 평화선언)이나, 나가사키의 이토(伊藤一長)시장이 동북아 비핵지대화 창설을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한다(2002년 8월 9일 나가사키 평화선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이 당수는 정책목표로서 첫째, 일본의 비핵불전(非核不戰)국가 선언, 둘째, 동북아시아 종합안전보장기구의 창설, 셋째,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설치, 넷째, 양국간 안보에서 다국간 협조로, 다섯째, 자위대의 축소개편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목표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동북아의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구상으로서

신뢰에 바탕을 둔 평화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이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다가설 수 있을 때, 동북아의 평화체제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이행되고, 비핵지대화 구상도 실현에 옮겨질 수 있을 것이다.

5. 맺는 말

일본의 시민사회는 오랜 기간동안 축적해온 평화와 반전, 비핵, 군축 등에 관한 노하우를 기초로 21세기의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정립하는데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이라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의 구상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가장 정곡을 찌른 것임에는 틀림없다 하겠다.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에 있어서 일본의 시민사회는 주변국을 리드하는 입장에 있다. 그들은 비핵·평화도시 선언운동, 원수폭 금지운동, 반원자력운동 등의 경험을 살려 순수한 마음으로 동북아에 있어서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상은 일본의 시민사회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국경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한편에서는 일본이 반핵·평화운동, 또는 평화에 대하여 남다른 열정과 애착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색안경을 끼고 보아왔던 적이 있다. 즉, 일본이 평화라는 것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열정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주변국들을 침략한 사실을 회색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또한 원자폭탄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과민반응을 보인 결과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일본이라는 국가와 일본의 시민사회를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본이 평화에 대하여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원자폭탄 투하에 의한 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승화시킨 일본시민사회의 평화운동의 발로라고 평가해야 옳을 것이다. 우리가 일본의 시민사회와 일본정부를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시할 때, 우리에게는 일본에 대한 의혹과 오해와 불신만이 증폭되게 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동북아를 비핵지대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에 있어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일본시민사회의 노력에 우리 시민사회도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호응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을 계기로 한국사회는 반전·평화 운동의 고두보를 확보하였으며 이제부터는 그러한 결집된 힘을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결집된 힘을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발산해 내지 못할 때, 그 사회는 퇴보하게 되고 대립과 분열이 횡행하게 된다. 다행히 우리보다 앞서서 반전·평화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일본의 시민사회가 21세기의 동북아 평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으로서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시민사회는 그들의 제안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받아들여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골자로 하는 동북아에 있어서의 평화체제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모색해 볼 시기에 와 있다 할 것이다.

끝으로, 2002년 나가사키시의 이토시장이 원폭기념일인 8월 9일에 발표한 '나가사키 평화선언'의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한다. "핵병기에 의한 참화는 나가사키가 최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 나가사키 시민의 이름으로 핵병기가 없어지는 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03년 3월 29일, 31일, 4월 1일자.
- 김영래. 2001. “NGO의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시민사회 활성화 전략에 관한 비교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1집 4호.
- 라미경. 2002. “동아시아의 안보질서와 NGO”. 『분단·평화·여성』 통권 제6호.
-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니타스.
-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편. 1992.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 Lester W. Milbrath and M. L. Goel. 1997. *Political Participation :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W. N. Coxall. 1986. *Parties and Pressure Groups*: New York: Longman.
- 淺井基文. 1996. 『非核の日本·無核の世界』(東京: 労働旬報社).
- 猪口邦子. 1996. 『戦争と平和』(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岡本三夫, 横山正樹編. 1999. 『平和學の現在』(京都: 法律文化社).
- 岡本宏編. 1986. 『自由·平等·平和と政治學』(京都: 法律文化社).
- 革新都市政策編集委員會編. 1983. 『革新都市政策-明日の人間都市-東京』(東京: 労働旬報社).
- 蒲島郁夫, 竹中佳彦. 1996. 『現代日本人のイデオロギー』(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久野收. 1996. 『市民主義の成立』(東京: 春秋社).
- 坂本義和編. 1995. 『世界政治の構造變動-市民運動』(東京: 岩波書店).
- 豊田利幸. 1982. “核兵器廢絶は可能である-恐怖を超えて”, 『世界』 9月號.
- 非核の政府を求める北陸三縣の會. 2002. 『日本海を非核·平和の海に』(金澤: 非核の政府を求める石川の會).
- 吉川勇一. 1991. 『市民運動の宿題』(東京: 思想の科學社).
- <http://kokkai.ndl.go.jp>(일본 국회회의록 검색시스템).
- <http://www.city.hiroshima.jp>(히로시마시).
- <http://www.nucfreejapan.com>(일본 비핵선언자치체협의회).
- <http://www1.city.nagasaki.nagasaki.jp>(나가사키시).
- <http://www5.sdp.or.jp>(사회민주당).